야권 대선 레이스

문재인+손학규+김두관 vs 안철수 투트랙으로

11일 밤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사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4·11 총선 이후 야권에선 '3+1 투 트랙'의 대선 후보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총선 패배 이후 돌파구가 필요해진 야권이 대선 레이스를 조기에 시작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로선 민주통합당에서 '문재인(상임고문)-손학규(상임고문)-김두관(경남지사)'이 경쟁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당 외에서 별도의 대선 행보를 펼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이 경선을 치르고 당 밖에 있던 박원순 후보와 결선을 치르는 방식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퀴마다 힘의 차이는 있겠지만, 4륜구동으로 레이스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이제 그들이 어떻게 경쟁할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야권의 패배로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으로 들어올 확률은 작아졌다고 보는 이가 많아졌다"고도 했다.

범야권의 4륜구동 레이스에 통합진보당도 이정희·유시민 공동대표 중에서 독자적으로 대선 주자를 선출한 뒤 야권연대를 추진하려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야권 레이스는 다자대결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 가장 주목받는 이는 안철수 원장이다. 문재인 상임고문이 총선을 지휘한 부산에서 민주당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박을 포함해 다섯 번이나 부산을 방문하면서 세를 결집시켰고, 그 벽을 문 고문이 완전히 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그의 '대선 본선 경쟁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안 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공식적으론 중립을 지켰다. 하지만 총선 기간 중 두 번의 지방대 강연과 선거 막판 동영상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었다. 민주통합당 인재근·송호창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사실상 야당을 지원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전한 것은 안 원장의 역할을 확대시킬 여지를 남겼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안 원장에겐 '황금분할'일 수 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면 당내에선 "안철수 없이도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산됐을 수도 있었다. 또 안 원장에겐 "대선에 나올 생각이면 당내 경선에 참여하라"는 압박도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때 중도·무당파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안 원장의 존재가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벌써부터 정계에서는 안 원장의 조기등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고문의 역할도 무시할 순 없다. 현재로선 안 원장과 '페이스메이커(pacemaker)'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당내 인물이기 때문이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총선 승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배를 마신 부산에서 살아 돌아오면서 야권 차기 주자의 입지를 다진 것만은 분명하다. 명지대 신율(정치학) 교수는 "(대선 주자들에겐)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부산에서의 총선 결과였다"며 "아쉬운 결과지만 문 고문에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제를 풀었다'는 이미지가 더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김두관 지사도 곧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소문이 정계에 돌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야권에서 '히든카드'로 꼽힌다. 경남에선 "문재인만으론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손학규 고문도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선전하면서 입지를 다졌다.

문, 부산서 경쟁력 입증 못 해
안, 대선 출마 선언 앞당길 수도

손, 수도권 유세 지원 입지 다져
김, 총선 뒤 바로 시동 걸 듯

총선 패배로 야권연대 희석
FTA 등 계속 발 맞출지 주목

그는 이번 총선에서 하루에도 열 곳 넘는 지역구를 다니며 지원유세를 벌였다.

대선 후보 레이스와 함께 총선 이후 정국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야권의 공세 강화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총선 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제주 해군기지 재검토, 불법 사찰 청문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연대한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집요하게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요인도 커졌다.

하지만 대선 후보 레이스와 함께 야권연대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대선 후보들이 중도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 원장을 민주당이 끌어안기 위해 강경 일변도의 노선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인식·양원보 기자 kangis@joongang.co.kr

통합진보당 지역구 7석 확실 19대 국회 제 3당 굳혔다

'국회 최루탄' 김선동도 재선

통합진보당이 전국 선거구 7곳에서 승리했다. 서울 노회찬(노원병)·이상규(관악을), 경기 심상정(고양 덕양갑)·김미희(성남 중원), 광주광역시 오병윤(서구을), 전북 강동원(남원·순창), 전남 김선동(순천·곡성) 후보가 1위를 확정했다.

진보당 후보가 9곳에서 1위를 기록했던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다. 전국적으로 1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을 얻어 비례대표를 합치면 10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은 이후 역대 최다 의석수다. 숙원이었던 원내교섭단체 결성은 어렵게 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정도의 존재감은 확보하게 됐다.

노회찬 후보는 노원병에서 'MB맨'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노 후보는 허준영 후보가 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옷을 벗겼던 악연이 있었다. 200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서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 책임론을 제기한 게 그였다.

관악을에서도 이상규 후보가 큰 차이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희철 후보를 눌렀다. 관악을은 이정희 대표가 경선 여론조사 조작으로 사퇴한 이후 같은 당 이 후보를 공천하면서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던 곳이다. 이정희 대표는 선거 막판 모든 일정을 관악을 유세에 집중할 만큼 공을 들였다.

광주 서을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오병윤 후보는 새누리당의 호남 진출을 노렸던 이정현 후보의 꿈을 무산시켰다. 한·미 FTA 국회비준 때 최루탄을 던졌던 김선동 후보도 민주통합당 노관규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재입성했다. 전북 남원-순창의 강동원 후보도 민주당 중진 이강래 후보를 꺾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서울 은평을 천호선 후보는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와 시종 엎치락뒤치락 숨막히는 승부를 벌인 끝에 분패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강기갑 후보도 새누리당 여상규 후보에게 패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51명의 후보를 냈고, 민주당이 무공천한 15곳을 포함해 34개 지역구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선거를 치렀다.

류정화 기자 jh.insight@joongang.co.kr

새누리 역학구도는

MB계 우수수 … 대선 향한 '박근혜당' 스타트

19대 총선 개표가 진행된 11일 밤 새누리당 이혜훈 종합상황실장이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 이름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김형수 기자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역학관계에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박근혜 중심의 정당'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다.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분리돼 계파 갈등의 불씨를 늘 품고 있었던 18대 때와 달리 19대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주와 함께 시작하게 됐다. 이명박계는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궤멸되다시피 했다. 당선자 대부분은 이미 박근혜계이거나 잠재적 박근혜계로 볼 수 있는 인사다.

비대위 체제가 등장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쥐게 된 박근혜계는 4·11 총선 이후 자연스럽게 당의 진로 탐색을 위한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지작업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충청권에서 다시 돌아온 강창희 (대전 중구·6선) 전 의원, 박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경환(경북 경산-청도·3선), 유승민(대구 동구을·3선) 의원 등이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의원은 국회의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선 국면에서 '돌격대장' 역할을 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6선 강창희, 국회의장 거론
최경환·유승민, 중심역할 맡을 듯

유정복·윤상현은 수도권 구심점
이혜훈·이성헌, 원외서 영향력

"특정 계파 색깔 짙어져
당내 쇄신파 역할 더 중요"

4선이 되는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은 부산의 좌장 역할을, 유정복(경기 김포·3선)·윤상현(인천 남을·재선) 의원은 수도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상황실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한 이혜훈 의원, 낙선한 이성헌·이정현 의원은 19대 때 원외가 되지만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 원내로 진입한 초선 의원들도 주목된다. 그 중 정책통인 안종범(비례대표)·강석훈(서울 서초을)·이종훈(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자는 박 위원장이 대선에서 내놓을 핵심 공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인 안종범 당선자와 함께 박근혜 위원장의 대표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만들었다.

당시와 달리 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새로운 공약 카드도 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을 지낸 이상일(비례대표) 당선자도 박 위원장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4·11 국면'에서 새누리당 쇄신파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남경필(경기 수원병·5선), 정두언(서울 서대문을·3선), 김세연(부산 금정·재선) 의원 등을 제외하고 쇄신파는 수도권에서 당이 고전하면서 상당수가 생환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쇄신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박근혜계라는 특정 계파의 색깔이 짙어진 당에서 쇄신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쇄신파는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한나라당의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무대 뒤에 머물던 박근혜 전 대표를 구원투수로 끌어내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구상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게 쇄신파였다. 쇄신파는 재창당이냐,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냐를 두고 박 위원장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중요 고비마다 박근혜계와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뒷받침이 있었기에 당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바꿔 달고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정강·정책을 만드는 게 가능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총선 이후에도 긴장 속 우호관계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쇄신파와 박 위원장의 관계는 총선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박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는 총선 이후 쇄신파의 쇄신 요구가 분출될 첫 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태정치를 없애기 위해 구시대적 중앙당 체제와 당 대표제를 폐지하고 원내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게 쇄신파가 총선 공천 전부터 유지해온 입장이기 때문이다.

허진·손국희 기자 bim@joongang.co.kr

현역 무더기 낙선, 선진당 운명은

2004년 참패 뒤 한나라에 흡수된
옛 자민련처럼 될 가능성 우려

11일 서울 여의도 자유선진당 당사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당선권은 3곳(아산과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에 그쳤고,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낙선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최대 승부처인 세종시도 심대평 대표가 직접 출마했는데도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충청 지역 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선진당은 18대 총선 당시 충청권 24곳 중 14곳을 차지해 총 18석(비례대표 포함)의 제3당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 충청 유권자들은 선진당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충청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나"라는 게 지역민심이었다. 세종시를 추진한 민주통합당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막아낸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이 지역 유권자에게 더 부각됐다. '출신 지역에 따른 투표' 양상이 '세대별 투표'로 바뀌는 추세도 이 같은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올 12월 대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려던 이회창 전 대표의 행보에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선 선진당이 "2004년 총선에서 4석에 그치면서 한나라당에 흡수된 자민련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정계 은퇴를 했었다. 그럼에도 영·호남 정당 구도가 유지되는 한 충청 지역정당이 소멸할 것이라고 보기엔 이르다는 평도 있다. 당 규모는 쪼그라들더라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연대의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여의도 자유선진당사서 심대평 대표(오른쪽)와 변웅전 선대위원장(가운데)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뉴시스]